

사)에너지전환포럼 바로잡기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0년 11월 10일(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배 포	2020. 11. 10(화)	
문 의	사무처장 직무대행 02-318-1418 energy@energytransitionkorea.org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바이든이 차세대원전에 올인?!

- 연구개발 단계 기술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는 보도는 왜곡보도
- 차세대원전, 혁신이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 중 하나로 언급했을 뿐
- 경제성과 안정성 문제로 2035년까지 대규모 상용화 어려워 발전부문 탄소제로에서의 역할 미비
- 바이든 그린뉴딜의 핵심은 태양광·풍력 확대와 전기차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 일자리 창출과 경기반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 차세대 원자력 등에 ‘올인’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11월 09일 자 서울경제 <“바이든, 차세대원전·전기차에 ‘올인’>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 링크:

[바이든, 차세대 원전·전기차에 '올인'](#) 서울경제 김영필 기자 11.09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기사 내용과 바로잡기>

기사 내용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회복과 이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국정 의 최우선 순위로 뒀다.
-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기반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 차세대 원자력 등에 ‘올인’하기로 했다.

바로잡기

- 일자리 창출과 경기 반등을 위해 차세대 원자력에 올인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선 공약에서의 차세대원전은 혁신이 필요한 부분의 연구 과제로 투자되는 것으로 당장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 반등 효과와는 무관합니다.
- 조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과 발전부문에서 2035년까지 탄소제로를 공약했습니다. 이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800만개 태양광 지붕 △5억 개의 태양광 패널 설치 △풍력터빈 6만개 설치 △에너지저장장치

와 재생에너지 전용 송전망 확충 △4년간 건물 400만 채, 주택 200만 채 에너지 고효율 개조 등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임기 4년 동안 2조 달러(약 2,300조 원)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차세대원전이 언급된 에너지혁신 연구는 2050년까지 혁신이 필요한 부분의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1/10 비용의 그리드저장기술,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차세대 건축소재, 네거티브 배출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세대원전은 혁신이 필요한 부분의 연구 과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 혁신 분야의 공약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반등을 이끌어내는 전기차, 건물리모델링,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를 전기차 확대와 동일선에서 엮어 지금 당장 상업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 또한, 차세대원전이라 불리는 SMR(중소형 원전)은 연구개발 단계에 있을 뿐이며, 최근 원자로 설계승인을 받은 NuScale은 기존 설계에 문제와 재정적 문제와 경제성 부족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Nuscale은 지난 2년간 예산투입은 예상보다 두 배 증가했고, 예정 완공일도 4년이나 늦춰졌습니다. 리액터 디자인에 대한 NRC의 안전 리뷰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차세대원전은 경제성과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2035년까지 대규모로 상용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발전부문에서 2035년까지 탄소제로를 하는데 차세대원전의 역할은 사실상 매우 미미합니다. 여러 기술적 옵션 중에 하나로 연구 투자하고 있을 뿐입니다.
- 탄소제로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경제 반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빠르게 집중해서 투자해야 할 것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입니다.
- 우리는 기후위기가자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 바르고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의 정치적 관계와 이해관계에 머무르기보다는 정론직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근거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의 내용만을 과대 해석해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리우고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있는 언론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참고1. 바이든 주요 공약

바이든 주요 공약	
1. 경제 및 산업	중산층의 재건 : 부(wealth)가 아닌 근로(labor)에 보상 - 연방 최저시급을 \$15로 상승('09년 이래 \$7.25에서 불변) - 트럼프 행정부의 부자 감세 철폐 - 소득세 최고세율을 39.5%까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 *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37%, 법인세율은 21% - 자본소득세 인상 미국내 생산 재건 - 미국산 상품·서비스 4천억불 구매(Buy American) - 미국 제조업 활성화 - 친환경 등 미래산업에 R&D 3천억불 투자 - 근로자 친화적 무역협정 - 대중국 강경 무역정책 - 핵심 공급망의 미국 복귀
2. 환경 및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화* * '19.6.4 종합계획 발표(10년간 1.7조불 지출) -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확대 - 각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가스석유산업 공유지임대 신규허가 금지 - 파리협정 재가입,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이행 - 배출감축 실패 기업에 대한 벌칙은 의회가 결정 - 원자력기술 투자확대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 “Keystone Pipeline XL Project” 중단 * TC Energy를 사업자로 하는 미-캐 송유관 연결사업
3. 교육	교육의 접근성 개선 - 저소득지역 학교 지원확대 - 교원급여 개선 -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해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
4. 형사제도·총기규제	형사제도 개혁, 부분적 총기규제 - 사형제도 폐지, 보석금(Cash Bail) 폐지 - 고속연사화기에 대한 자발적 판매반납 사업 추진
5.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부활·확대 - 오바마케어를 부활시키되 보조금 확대 - 정부주도로 제약회사들과 약가협상(해외가격 참고)
6. 이민·국경	이민·국경통제 완화 : 미국의 근본은 이민자의 나라 - 불법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기회 부여 - 일부 아동 불법이민자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 부여 - 정치적 난민에게 심사기회 제공

참고2. 바이든 클린에너지 공약

◆ 바이든의 (클린)에너지 관련 공약	
1. 첨단 인프라 구축	○ 도로, 다리,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인프라 재구축 ○ 철도혁명을 통해 철도를 전기화하고 화석연료 배출 감축 ○ 폐기 플랜트·산업시설·탄광 등을 미래산업 허브로 육성
2.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진	○ 미국산 친환경자동차 생산·사용을 정부조달을 통해 촉진(300만대) ○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구축사업 추진 ○ 2030년까지 모든 버스생산을 무탄소 전기버스로 전환
3. 친환경 발전산업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에너지효율을 증진하고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세계개편
4. 건축분야 혁신	○ 4년간 400만개 건물과 200만개 주택을 친환경으로 전환 ○ 친환경 공공주택 150만개 공급
5. 친환경 에너지 혁신에 10년간 4,000억불 R&D 지원	○ 클린에너지, 클린교통, 클린산업, 클린자재에 R&D 지원 - 기후관련 연구기관 ARPA-C 신설을 통해 R&D* 총괄 * 리튬이온 배터리의 1/10 비용의 그리드저장기술, 차세대핵발전기술, 환경친화냉난방기술, 지속가능한 건축,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추출, 저탄소 건축자재 등
6. 지속가능한 농업에 투자	○ 친환경기술의 농업도입을 위한 농업종사자 지원
5. 전통적 에너지 기반 산업·지역 지원	○ 석탄산업 종사자(탄광·화력발전소)의 퇴직급여 등 복지, 산재처리, 직업전환을 국가가 지원하고, 관련 지역사회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자

◆ 바이든의 환경(기후변화) 관련 공약	
1. 2050까지 완전친환경 경제 및 탄소배출 제로(zero)화 달성	○ 취임 첫해에 이행준수 메커니즘과 단계별 목표를 포함한 법령 도입 - 메탄배출기준 강화, 정부조달시장에서 친환경 기술 및 운송수단 우대, 정부시설 친환경 전환, 교통분야 온실가스배출 감축, 바이오연료 투자 등 ○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R&D에 대규모 투자(10년간 총 4000억불) - 에너지 그리드저장, 소형 원자력발전소, 친환경 냉난방기술, 친환경 건축, 수소연료, 건설·농업·에너지발전 분야 탄소감축 ○ 친환경 에너지 혁신 가속을 위해 전국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추가, 전기차 관련 세제변경, 州별 친환경 제조산업군(중소기업, 대학, 벤처, 근로자, 노동조합, 州정부) 구축
2.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대응력 강화	○ 건축·수자원·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 지역별 기후대응계획 수립 - 특히, 유럽·중국을 넘어서는 고속철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3. 국제공조 주도 : 파리협정 재가입, 주요국과 감축 합의·공개·준수	○ 중국과 탄소감축 양자협정 체결, 중국에 석탄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친환경-인프라 국제개발협력 모델 제시
4. 환경양극화(Climate Gap)해결	* 환경오염의 피해(산재·지역사회 건강악화)가 낙후 지역사회에 편중된 현상 ○ 오염관련 형사집행 강화를 美환경보호청(EPA)과 법무부에 지시, 책임 범인의 대표자 처벌도입 등 환경형사책임 관련 개정 ○ 친환경 혁신의 수혜를 오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에 우선배분